

전북, 담배꽂초로 번진 화재 130건

〈10년간〉

2명 부상, 22억여원 재산 피해
차량 적재함서 발화 가장 많아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 커



1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10년간 전북 지역에서 부주의로 인한 차량 화재는 모두 339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유토이미지./유토이미지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로 인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10년간 전북 지역에서 부주의로 인한 차량 화재는 모두 33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30건이 담배꽂초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 불로 2명이 다치고 22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발화지점별로 보면 차량 적재함에서 발생한 경우가 69.2%(91)로 가장 많았고, 기타 외부 21.5%(28건), 차량 실내 9.3%(11건) 순이었다.

또 차량 실내에 담배꽂초를 방치(11건)해 발생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단 투기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4일 완주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1t 화물차 적재함에서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3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1일 적재함에 의자와 탁자, 파지 등을 싣고 전주의 한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났다. 주변에서 날아온 담배꽂초 불씨가 파지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물자동차는 적재함이 개방된 경우가 많고, 주행 시 앞에서 날아온 담배꽂초가 공기를 타고 적재함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도 소방당국은 전했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담배꽂초 불

법 투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84.9%(90건)로 다른 차량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또 적재함에 떨어진 담배꽂초는 운전자가 장시간 인지하지 못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담배꽂초 무단 투기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 전시회

전남도, 20년 간의 기록

전남도는 6·15남북정상회담 21주년을 기념해 14일부터 18일까지 도청 1층 윤선도홀에서 ‘평화통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선언했던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 문재인정부 출범 후 성사된 네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사진과 전남도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남북교류협력 20년 간의 기록 등을 포함해 북한 주민의 일상을 담은 40여 점의 사진도 함께 전시한다.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가상현실(VR) 체험행사에선 북한의 평양 시내 모습과 만수대, 옥류관, 대동강 등 북한 지역 명소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이 실제 사용하는 다양한 생활물품과 북한 애니메이션 등도 관람할 수 있다.

전시회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해진 시간마다 관람객 10여 명을 대상으로 남북통일과 북한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규용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전남은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라며 “이번 전시회 개최를 통해 도민 자긍심을 높이고,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민선7기 들어 도와 시·군,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를 설립하고 대북 의약품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2월 호남권 통일센터가 완공되면 통일 분야 종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남북협력사업도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경북도, 오늘부터 경로당 운영 재개

어르신 일상 회복 지원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경북도가 14일부터 대부분의 경로당 운영을 재개한다. 그동안 도내 경로당은 코로나19로 부분 운영해왔다.

그러나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경북도는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폭염에 대비하고자 전면 운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경시와 김천시, 칠곡군은 고령층 백신 접종 일정과 코로나 발생 추이에 따라 재개 일정을 검토 중이다.

경북도는 23개 시군의 경로당 8146곳 중 73%를 철저한 방역조치와 거리두기 준수 하에 운영하고 경로당마다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이용자 예

방접종 확인, 방문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9~11일 경로당 전면 운영재개에 따른 운영실태 점검을 벌였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도내 60~74세 어르신 접종대상자 54만 3797명 중 16만 4113명(30.2%), 75세 이상 고령 어르신 접종대상자 24만 5305명 중 17만 6781명(1차, 72%), 11만 756명(2차, 45%)이 접종을 마쳤다.

도내 500여명으로 구성된 경로당 행복도우미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건강·취미 등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쉼터도 운영한다.

노인시설(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 주민센터, 은행 등 전체 5029곳으로 그 중 경로당이 대다수(4561곳, 91%)다.

이번 경로당 전면 운영 재개로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세은 경북도 어르신복지과장은 “외부인 출입 통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 비치, 경로당 행복도우미들을 통한 어르신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광주시가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에 나선다.

광주시 10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석면, 치명적 질병 유발 발암물질

광주시가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에 나선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흉막 등에 붙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 전역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수조사는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2013년 기준 광주시역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모두 1만 6000여 동에 이른다. 이 가운데 주택이 1만 1000여 동, 비율로는 68%에 이른다.

이번 실태조사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기본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뉘어 이뤄진다. 기본조사는 소재지, 건축물대장 등제내용 등을 조사하고, 현장조사는 건축물 실제 용도, 미등재 건축물 건축면적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조사 결과는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해 관리될 예정이며, 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공공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와 석

면해체加里 등록제 운영, 석면 피해구제 급여 사업 등도 함께 진행 중이다.

우선, 노후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지원비 10억 2500만원을 투입한다. 지붕이나 벽체에 석면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 376동이 대상이며 슬레이트철거는 물론 운반, 처리, 지붕개량까지 한꺼번에 지원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우선 지원가며, 한 동 철거 시 전액 지원되고 개량일 경우 최대 1000만원 안에서 지원된다. 일반가구 경우에는 철거 시 344만원, 지붕 개량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시는 2012년부터 54억 원을 투입해 2950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처리했다.

시는 또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관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6개월마다 건축물 손상 정도를 자체조사하도록 지도감독도 이어오고 있다. 석면 건축자재가 50㎡ 이상의 면적에 사용됐거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함유 인식표를 기재한 석면지도 작성해야 한다.

시는 석면건물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비산되는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석면해체 감리인 등록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

곡성군, 수해 예방 예산 450억 지원 건의

안전성 강화사업 추진

지난해 폭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이 수해 예방을 위해 정부에 45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곡성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섬진강 관련 2가지 사업에 예산 45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곡성군은 우선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치수 안전성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섬진강변 도로 등이 침수돼 마을

등이 고립될 경우 교량을 통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호곡교 연결교량 가설공사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곡성군은 해당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하천 종합정비 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함을 호소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수해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고통이 컸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만큼 익산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남원시

상수도 시설물 일제 점검

전북 남원시가 여름철 장마에 대비한 상수도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점검반을 구성, 배수지 계통별로 오는 30일까지 상수도시설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정수장 1개소, 배수지 9개소, 가압장 42개소, 교량의 관매달기 상수관 등이다.

/전북=김태수 기자